
성과관리 전략계획

[2026~2030]

2026. 8.



기획예산처

■ 「2026~2030년도 기획예산처 성과관리 전략계획」(2026. 8.)

■ 기획예산처 혁신행정담당관 (044-214-1434)

■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정부세종청사 5동

목 차

I.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	1
1. 그간의 정책성과	1
2. 향후 정책추진 방향	10
II.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	19
1. 기획예산처 일반 현황	19
2.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	22
III. 세부 추진계획	24
1. [전략목표Ⅰ] 중장기 미래 대비	24
2. [전략목표Ⅱ] 적극적·전략적 재정투자	38
3. [전략목표Ⅲ] 재정 인프라 혁신	47

I.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

1

그간의 정책성과

(1) 중장기 미래 대비

1

중장기전략 수립 및 구조전환 대응

- (중장기전략 수립)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내외 환경변화, 도전요인을 분석·점검 → 미래비전 및 대응전략 마련
 - 민·관이 참여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*를 구성·운영('12.4월~)하여 종합 중장기전략 마련('25.2월 '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' 발표)
 - * 근거규정 :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(대통령령)
 - AI·디지털 전환 가속화, 인구구조 변화·기후변화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및 비전 제시
- (구조전환 대응) AI 등을 활용한 우리 경제·산업구조 대전환,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노력
 - (AI 대전환) 한국이 보유한 IT 기반, 제조 역량 등을 통해 AI 글로벌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대폭 확대
 - '26년 AI 지원 예산 전년 대비 3배 확대('25년 3.3→'26년 9.9조원)
 -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「인공지능 기본법*」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
 - * 주요 내용: ①인공지능 연구개발, 학습용 데이터 구축, 기업의 도입·활용 등 지원, ②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 투명성·안전성 확보 의무 부여 등
 - (탄소중립 기반 구축)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설정 및 NDC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
 - * 경제 상황, 산업계 부담, 산업 체질 전환 등을 종합 고려하여 △53 ~ 61% 확정
 - (배출권) 배출권 총량 및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은 「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」('26~'30) 수립
 - *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(약 25억 3729억만 톤) 결정 및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에 따른 업체별 무상할당분 결정

제 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목표비율

구분		'26	'27	'28	'29	'30
탄소누출	발전	15	20	30	40	50
非우려 업종	발전 外	15				
탄소누출	우려 업종	0				

(%)

- (기타)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,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,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과제 발굴

2 포용성·지속가능성 제고

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저출생·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부문별 축소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
 - 「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('22.12월)」, 「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('24.6월)」 발표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 마련
 - 「새정부 경제성장전략('25.8월)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를 발굴*하여 합계출산율 반등**에 기여
- 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,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등
- ** 합계출산율(명) : ('15) 1.24 ('20) 0.84 ('21) 0.81 ('22) 0.78 ('23) 0.72 ('24) 0.75 ('25p) 0.80
- (협동조합 활성화 지원)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설립부터 성장·협업까지 통합적 지원 확대
 - *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산(억원) : ('23) 75.1 → ('24~'25) 15.8 → **(26) 29.3**
- ① (설립 및 운영지원)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상시자문, 업종별 창업·규모화 컨설팅 등 맞춤형 경영지원 확대
- ② (판로지원) 협동조합 상품 진단, 민간 유통채널 확보 및 입점 지원, 온·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 등 시장접점 확대 지원
- ③ (교육지원) 조합원 참여와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공시, 총회 등 관련 교육 지속 추진
- (현장 간담회) 권역별 협동조합 간담회를 개최하여, 현장의 의견을 경청·소통하고, 정책 마련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

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

- (중장기 재정전략 수립)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·재정여건을 분석하고, 재정총량 목표와 재정운용 전략 제시
 - 성과중심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·성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 구현을 위한 '25~'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 -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고,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 제3차 장기재정전망 실시
- (고강도 재정혁신)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고강도 재정혁신 방안 마련·추진
 - (재정구조 혁신) 「재정구조 혁신 TF」를 출범('25.9월, 차관 주재)하여 지출+세입+사회보험·연금+재정제도 등 재정 전반 논의
 - 「지출효율화 TF」를 통해 의무·경직성 지출 제도개선, 유사·중복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적극 발굴
 - (재정지표 관리) 재정 본연의 역할과 함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* 등 재정혁신을 병행하여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
 - * '26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△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
 -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기구·신평사의 긍정 평가도 확보
 - (재정분권) 5극3특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*에 재정분권 반영
 - * (국정과제 53)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
4 참여·공개·협력 기반 재정운용

- 국민참여예산 제도 개선, 재정교육 외연확대, 지방정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
 - (참여예산) 신규사업 및 지출효율화 국민제안, 집행현장 모니터링 등 예산 소 과정에의 국민참여 확대
 - * '26년 예산에 9건(137억) 반영('25년 50억원) ** '지출효율화 국민제안' 시범실시('25.7월)하여 '26년 예산안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에 반영

- (재정교육)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**이러닝 콘텐츠 개발** 등 기존 공무원 중심의 재정교육에서 **일반국민으로 교육 외연 확대**

* 교육 수료자수(명) : ('22) 5,173명 → ('23) 5,145명→ ('24) 6,663명→ ('25) 7,105명

** 대국민 재정용어 해설 이러닝 콘텐츠(숏폼, 롱폼) 개발공개(25.12.1)

- (지방정부 협력) 기획처 장관 주재로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**「중앙-지방재정전략협의회」**를 신설하여 지방정부와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

* 기획처 차관 주재 중앙-지방 재정전략협의회 개최('26.2.26.)

- **아태재정협력체(PEMNA*) 운영·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재정혁신 사례를 개도국에 공유하고 한국 재정운영 성과 국제사회 확산**

* **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-Pacific**: 아시아 14개국 간 재정 분야 정책협의체로 분과회의·방문연수 등을 통해 회원국 간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

- **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⁺) 등 재정시스템·개혁 사례를 아시아 개도국에 소개하여 개도국 재정운영 선진화 지원**

* 한국은 성과주의 예산, 발생주의 회계 등 총 90여회 발표

- 한국의 재정정책 대응사례*를 PEMNA 채널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**한국 재정성과 확산 및 대외 신뢰도 제고**

* 예) 코로나19 팬데믹 재정대응 사례('20년), 1~2차 민생소비쿠폰 지급 사례('25)

- **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고,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**

- **dBrain⁺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예산 편성·집행, 자금 이체, 결산, 성과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소과정을 지원하여 차질없는 재정업무 수행**

- 재정정보공개플랫폼 **「열린재정」**에 공개되는 **재정통계*** 및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 공개 **내용 확대****를 통한 **재정운용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**

* (중앙) 141종 → 157종, (지방) 39종 → 51종, (지방교육) 26종 → 34종

** 세부사업보다 하위인 내역사업 정보 및 산출근거, 결산내용 등까지 확대

[2] 적극적 · 전략적 재정투자

□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·전략적 재정투자로 경기 회복 및 성장의 발판 마련

❶ (적극적 재정운용) 새정부 추경(30.5조)과 '26년 정부안 편성(728조, +8.1%)을 통해 경기회복과 새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

○ 더불어, ①재구조화, ②경상비·③의무지출 절감, ④국민제안 반영 등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(△27조)을 통해 핵심사업 투자 자원 마련

❷ (전략적 투자)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미래대비·경제활력·사회안전망·민생회복을 위한 투자에 집중

○ 고용안전망 확충, 고등교육 혁신, 탄소중립 저변확대,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등 고용·교육·문화·환경분야 맞춤형 재정투자 추진

○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대비 체질 개선을 위해 중기·소상공인 맞춤형 지원, 첨단산업 기반강화, R&D 등 효과적 재정투자 추진

○ 저소득층·장애인 등 취약계층, 한부모·가정밖 청소년 등 소외 계층 지원 강화, 연금개혁 뒷받침 등 사회안전메트 구축

○ 공공치안 인프라 확충 및 국방 역량을 고도화하고, ODA규모 내실화 및 지방균형발전 투자를 확대

[3] 재정 인프라 혁신

1 재정성과 관리 강화

- (성과목표관리) 각 중앙관서가 설정한 성과목표·성과지표를 차년도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통해 점검·관리
 - '24년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507개 성과지표 중 416개 목표 달성(달성률 82.1%)하여 전년대비 +5.2%p 상승
- (성과관리)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침인 「'22~'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」을 수립('22.8월)하여 성과관리 방향성 정립
 -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에 기반한 「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」을 마련('24.12)
 -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라 211개 사업(50.4%) 구조조정
 - *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와 정부안 편성 시 반영
- (기금자산운용) 연기금투자폴* 자산운용 제도 개편·보강을 통해 운용 효율화 및 수익률 제고를 달성하고 재정효율성 제고
 - * 중소형 기금의 효율적인 여유자산 운용을 위해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(pooling)하고 재간접 펀드(Fund of Funds) 방식을 통해 위탁 운용하는 제도
 - 제도 도입('01년) 이후 모든 투자자산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익률*을 달성하고 급격한 양적 성장을 달성
 - * 투자폴 운용 수익률(시장 대비 초과수익률) : ('21) 1.49(+0.28), ('22) △2.16(△0.07), ('23) 6.67(+0.78), ('24) 5.28(+0.69), ('25) 6.85(+0.63)

2 재정투자 관리 강화

□ (재정사업 타당성심사) 재정사업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심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

* '99년 제도 도입 이후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선별
(예타 수행 : 1,064개(551.7조원) → 미통과 : 382개(209.3조원))

○ 변화하는 경제·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예타제도 지속 개선

- R&D 사업의 신속·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&D 예타 폐지

□ (민간투자) 경기진작 등으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, 미래 인프라 적기 확충을 위하여 '재정·민간투자' 병행

○ 재정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, 후속조치를 완료*하고 '25년부터 컨설팅(신규) 등 추진**

*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('24.10월) → 특별인프라펀드 신설('25.2), 인프라펀드 과세 특례 일몰연장('25.8월, 조특법 개정) 등

** 민간투자사업 집합교육(부처·공공기관, '25.4.8.~4.9.), 현장컨설팅(75차례) 등 실시

□ (재정집행)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관리로 '25년 집행 목표 초과 달성

○ '25년 중앙정부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 기록

* 신속집행 목표/실적(중앙, 6월말, %): ('23) 65.0/65.7 ('24) 65.0/66.3 **(25) 66.8/69.5**

○ 1·2차 추경예산 모두 국회 통과 후 3개월내 목표 초과 달성

* 1차 추경: (목표) 5~7월까지 70.5% → (실적) 7월말 74.0%

2차 추경: (목표) 7~9월까지 87.5% → (실적) 9월말 92.4%

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

□ 복권사업 운영의 안정성·효율성 제고

○ 제5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및 개시

- (주)동행복권은 '24년~'28년까지 복권수탁사업자로서 역할 수행, 5기 복권시스템 신규 구축('24~'25년)하고 복권사업의 안정성 강화

○ 복권구매 편의 제고를 위해 로또 모바일 도입 및 판매점 확충

-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년간 단계적 모집

* 판매점 개수: ('22) 7,904개 → ('23) 8,438개 → ('24) 8,865개 → ('25) 9,530개

□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

○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

- 지속적으로 복권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, 저소득·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

* 복권기금 사업비 : ('04) 9,180억원 → ('25) 3조 4,028억원(+270.7%)

○ 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

-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를 강화해 성과에 따라 지원규모 등을 차등화하고,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 적기·적정 집행 관리

□ 지속적인 공익홍보로 복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

○ 조사결과, 국민 10명 중 7명이 '복권이 있어 좋다'고 평가

* 복권에 대한 긍정 인식도(% , 입소스) : ('14) 62.9 → ('20) 66.5 → ('24) 69.6

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

- (부정수급 근절) '17년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) 구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본격 점검·관리 착수
 - (대상) 자치단체보조금을 제외(별도 관리)한 민간보조금 관리·점검*
 - * '25년 보조금 교부액 126조원 중 e나라도움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은 30조원(24%), 별도 관리대상인 지방정부 등의 직접 집행 보조금은 96조원(76%)
 - (점검체계) 대법원·국세청 등 311개 시스템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부정징후 사업을 추출*하고,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 여부를 확인
 - * 특정거래처 편중, 직계존비속 간 거래, 세금계산서 분리발행 등 추출패턴 적용
 - '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 설치 이후 합동(특별) 현장 점검* 확대 등으로 적발 실적 증가**
 - * 기획처·소관부처·재정정보원, 회계법인이 참여하여 현장을 점검
 - ** 부정수급 추출건수/적발건수(금액 백만원) :
('18) 4,291/18(169) → ('22) 4,603/260(9,807) → ('25) 10,780/992(66,765)
 - 부처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* 특별현장 점검 실시('24년 시범 실시 → '25년 본격 시행, 106건)
 - * 적발 실적이 지극히 낮은 부처·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, 부정징후 금액이 큰 사업 등
- (미정산·미징수 관리) '24년부터 관계부처 합동 회의 등을 통해 e나라도움 개통('17년) 이후의 보조금 미정산·미징수* 사업을 본격 관리 시작
 - * 국고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2개월내 정산(자치단체보조사업은 3개월)하고,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내 의무적으로 국고 반납 필요(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등)
 - ('24년) '17~'22년 완료사업 중 미정산·미징수 상태로 남아있던 4.5조원(22만 건)을 확인하여 관리 ⇒ 총 3.4조원*(74.8%) 정리
 - * 현금수납(세외수입) 1.7조원(일반회계 5,968억원, 특별회계 3,569억원, 기금 7,481억원)
 - ('25년) '24년 미정산·미징수 정리 잔액 등 1.9조원과 '23년 미정산·미징수 1.5조원의 3.4조원을 확인 ⇒ 총 2.7조원*(78.4%) 정리
 - * 현금수납(세외수입) 1.1조원(일반회계 3,392억원, 특별회계 4,852억원, 기금 2,526억원)

(1) 중장기 미래 대비

1 중장기전략 수립 및 구조전환 대응

- (중장기전략 수립) AI대전환, 인구위기, 탄소중립, 양극화, 지방 소멸 등 5대 구조적 난제를 중장기 시계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추진
 - (의견수렴) 일반국민, 관계부처·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함께 만드는 전략 수립
 - (추진체계) 우리처 주관하에 대학·정부출연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략수립
- (산업구조 대전환)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도약을 위하여 AX·GX*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·산업 구조를 혁신
 - * AI Transformation, Green Transformation
 - 범부처 회의 및 업종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진행
- (탄소중립 기반 구축)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의 효과적 달성, 기후테크 등 탈탄소 신산업 육성
 - 우리나라의 주요 감축 기제인 배출권거래제 활성화
 -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등 기후테크 육성 및 감축 동력 강화
 -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우리 기업 부담 완화
 - 美·EU 등 글로벌 동향과 기업 부담을 고려한 '한국형 지속가능공시' 마련 및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 ESG 역량 강화

2 포용성 · 지속가능성 제고

- (양극화 대응) AI대전환, K자형 경제 고착화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위해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및 시급한 현안 대응
 - (중장기전략 수립) '중장기 국가발전전략' 일환 사회분야 중심 통합성장 도전과제 대한 중장기전략 마련(2030, 2030+ α , 단기 정책대응과제 포함)
 - 소득분배, 세대·계층간 고용격차, 노동시장 이중구조, 수도권 집중 등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
 - (현안 대응) 민생, 청년, 일자리, 노동, 지역균형발전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관련 회의체 대응 및 재정 필수지원 강화 추진
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추세의 반전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부문별 충격에 대한 적응력 제고
 -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형성 생애주기 지원 강화*와 함께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사회 구축**
 - * 일·가정 양립 문화 조성, 출산·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, 주거·일자리 지원 강화 등
 - ** 고령자 고용 지원,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확립, 고령자 복지제도 재구조화 등
 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기반 강화* 및 인구 감소에도 국가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지방·교육·국방 등 부문별 시스템 개편**
 - * 경제활동 참여 유도, 미래형 인적자본 양성, 신산업 활성화 지원 등
 - ** 국방·교육 등 필수서비스 및 지방 SOC 공급 체계·방식 개선 등
- (협동조합 활성화 지원)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분석하고, 이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 도출
 - (경쟁력·정체성 강화)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, 협동조합의 자주·자립·자치적 활동 촉진
 - (연대·협력 시너지 창출) 연합회 및 거점실행조직*의 기능 강화, 사회연대경제 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·금융 지원
 - * 업종·지역별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 선정 및 중앙·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 지원

- (지역사회 문제해결 역할 강화) 의료·돌봄, 주거·관광·교육, 농어촌 서비스 공급 등 지역공동체 단위 삶의 필수영역 보완 역할 지원
- (‘협동조합의 날’ 행사) 기념행사 지속 개최, 사회연대가치 확산 등 홍보 확대 및 인식 제고 도모

3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

- 성과 중심·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‘재정-경제 선순환’을 구현하기 위한 ‘26~‘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 - 중기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·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, 중기계획의 실효성·책임성 제고 및 전략성 강화 노력
- 「재정구조 혁신 TF」 상시 운영, 재정지표 분석·관리체계 고도화,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 마련 등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
 - (재정구조 혁신) 「재정구조 혁신 TF」를 통해 지출 + 세입 + 사회보험·연금 + 재정제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
 - (재정지표 관리) 재정적자·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, 우리 재정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추진
 - (재정분권) 중앙·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주도 성장 지원
- 거시경제 관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 확충
 - 특히, 재경부·금융위·한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 강화

4 참여 · 공개 · 협력 기반 재정운용

- 재정운용全过程에 국민·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참여 소통 확대 추진
 - 재정全过程 국민 제안범위 확대, 시민단체 역할 강화 등 국민참여예산 제도 확대 개편
 -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해 재정교육 강화 추진
 -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재정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재정·정책 협력 소통 강화
- 주요국 정부와 고위급 협의 채널 구축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재정협력에 적극 참여
 - 주요국 재정·기획 당국과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해 재정·미래 전략분야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공조 강화
 - 국제기구·다자협의체의 틀에서 다뤄지는 재정거버넌스 및 중장기 구조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
- 재정정보 공개 내실화·확대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
 - 중앙·지방·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 범위를 넓히고, 알기 쉽고 투명하게 재정정보 확대 제공

[2] 적극적 · 전략적 재정투자

- 새로운 시대로 대전환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「적극재정 → 성과제고 → 경제성장 → 지속가능재정」 선순환 구조 정착
 - 우리 경제의 대전환·대도약을 뒷받침하고, 국정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재정 기조 유지
 -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성과 기반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 프로세스 구축
- 미래대비, 성장잠재력 제고, 사회안전매트, 국익확보·안보강화 등 핵심 투자과제 적극 투자
 - (미래대비 투자) 적극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안전일터 조성, 고등교육 혁신,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환, K-콘텐츠 수출·문화향유 격차 해소 등 사회 분야 맞춤형 재정 투자
 - (성장잠재력 제고)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, 창업생태계 조성, 과학기술과 AI의 융합 통한 기술 주도 성장 및 AI 3강 공고화 등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
 - (사회안전매트)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,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
 - (국익확보·안보강화) 강군 육성·국익 중심의 외교 및 치안·국민 안전확보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투자를 확대
- 철저한 성과 기반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하여 핵심사업 투자 자원 마련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 - (재량지출) 저성과·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, 연례적 행사·홍보 등 경상경비도 지속 절감하여 15% 감축
 - (의무지출)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10% 수준 절감 목표 설정

[3] 재정 인프라 혁신

1 재정성과 관리 강화

- (재정사업 평가) 관계부처 합동, 외부 전문가 중심의 「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」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객관성·실효성을 제고
 - 평가대상 중복 및 부처 평가부담 최소화, 평가결과의 체계적 환류를 위해 개별평가를 통합 성과평가와 연계·통합 운영
 - 평가단의 10% 내외는 시민사회,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하여 “국민의 눈높이”에서 낭비·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
- (성과목표 관리) 성과목표 관리 단위 점검·개선* 및 인센티브 강화, 재정정보 확대제공 등 성과목표관리 실효성 제고
 - * 세부사업 규모, 사업목적의 이질성 정도 등에 따라 ❶별도 성과지표 설정(소규모/이질성 小) 또는 ❷프로그램 분리(대규모/이질성 多)
 - '25년 신규 도입한 성과목표관리 우수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처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대폭 강화
 - 열린재정 포털에서 부처별 성과목표관리 결과의 주요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공
- (자산운용 관리체계 고도화)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공적역할 제고를 위해 기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책 기능 강화
 - 기금 여유자금의 공통 기준으로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 원칙 및 주요 정책방향을 고려한 운용방향 마련
 - 기금의 효율적 자산운용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해 ‘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’를 신설

2 재정투자 관리 강화

- (재정사업 타당성심사) 경제·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, 객관·공정·전략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**재정의 효율성 제고**
 - 균형성장 및 국가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지속 추진
 - 연 4회(분기별) 예타 대상·면제사업을 선정 및 검토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적기 투자 지원
- (민간투자)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❶경제성장, ❷국민 참여 확대, ❸지방의 민자 활성화, ❹국민 안전을 뒷받침
 - 민자 영역을 신사업·신유형으로 확장,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등을 통해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
 - 인구감소지역의 민자사업과 지역업체 민자사업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*하고, 민자사업의 안전기준 신설·강화

*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, 지역업체 우대가점 신설 등
- (재정집행) 경기·민생안정 등에 대응하여 재정집행관리
 -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신속집행 목표 설정·관리
 -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경제에 밀접한 핵심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별하여 집중 집행관리

3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

- (복권사업 지속가능성 제고)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판매방식 개편,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→ 소비자 요구에 탄력 대응
 - 젊은 세대의 신규 유입 확대를 위한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*, 기부·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공간의 재구조화 추진('27년)
 - * '26.2.9 상반기 시범운영 → 하반기 본격 도입
 - 모바일 환경하에서 판매점 상생방안 마련('26년)
 - 결제수단 다양화, 신상품 도입 등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복권시스템 개편(~'31년)
- (복권 인식 제고) 복권의 공익성·건전성 지속 제고
 -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복권산업의 건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
 - 건전한 복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복권관련 불법행위 대응 및 구매자 보호조치 강화 등 적극 추진
- (지원사업 효율화) 선택·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
 - 그간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복지사업 특유의 경직성, 일반회계 보충재원 인식 등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운영되는 측면
 - 이로 인해, 일반국민들의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
 - ⇒ 일반국민수요, 주요 해외사례 분석,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선택·집중(브랜드화) 및 효율성 제고

4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

- (단기) 국고보조금 관련 재정규율이 확립될 때까지,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미정산·미징수 관리 노력을 지속 추진
 - (부정수급) 현장점검 강화, 거버넌스 개편 등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(‘26.3월 국무총리 주재 발표)」의 철저한 이행 추진
 - 부처합동 현장점검 대폭 확대, 온·오프라인 신고플랫폼 구축, 신고포상금 확대, 제재부가금(보조금 반환 外 추가) 대폭 상향 등
 - 보조금관리위(보조금 컨트롤타워) 권한 강화, 심사소위(1천만원 이상 부정수급건 직접심의) 신설, e나라도움(보조금관리시스템) 고도화 등
 - (미정산·미징수) 반납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한편, 미반납 사업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안 시행
 - (점검강화) 부처별·지방정부별 반납실적을 분기별 보조금관리위 보고, 연 2회(3, 9월) 자체점검 결과 시스템 의무등록 조치 등
 - (제재·인센티브) 미반납 사업은 추가교부 제한(보조금관리지침 개정), 집행잔액 반납실적을 균특 포괄보조금 차등 기준으로 반영 등
- (중장기)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교육·컨설팅 등을 통한 예방활동도 점진적으로 강화
 -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분석 등을 통해 점검단의 역량을 강화하여, 대상기관에 사전예방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
 - 보조금 주요절차(신청, 교부·집행, 정산·반납) 계기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집중실시하고, 부정수급 빈발 업무에 사전 컨설팅 제공
 -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사항에 대한 포상 실시 검토,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권고 등 심사 소위의 역할 확대

II.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

1

기획예산처 일반 현황

[1] 조 직

□ (본부) 3실, 1대변인, 1정책보좌관, 13국·관·단, 52과

기획조정실	정책기획관
예산실	예산총괄심의관, 사회예산심의관, 경제예산심의관, 복지안전예산심의관, 행정국방예산심의관
미래전략기획실	성장기획정책관, 통합성장정책관, 재정혁신정책관, 재정참여정책관
재정성과국	재정성과국, 재정투자심의관
국고보조금관리단	국고보조금관리단

□ (소속기관: 1) 복권위원회사무처(1처장, 3과)

[2] 인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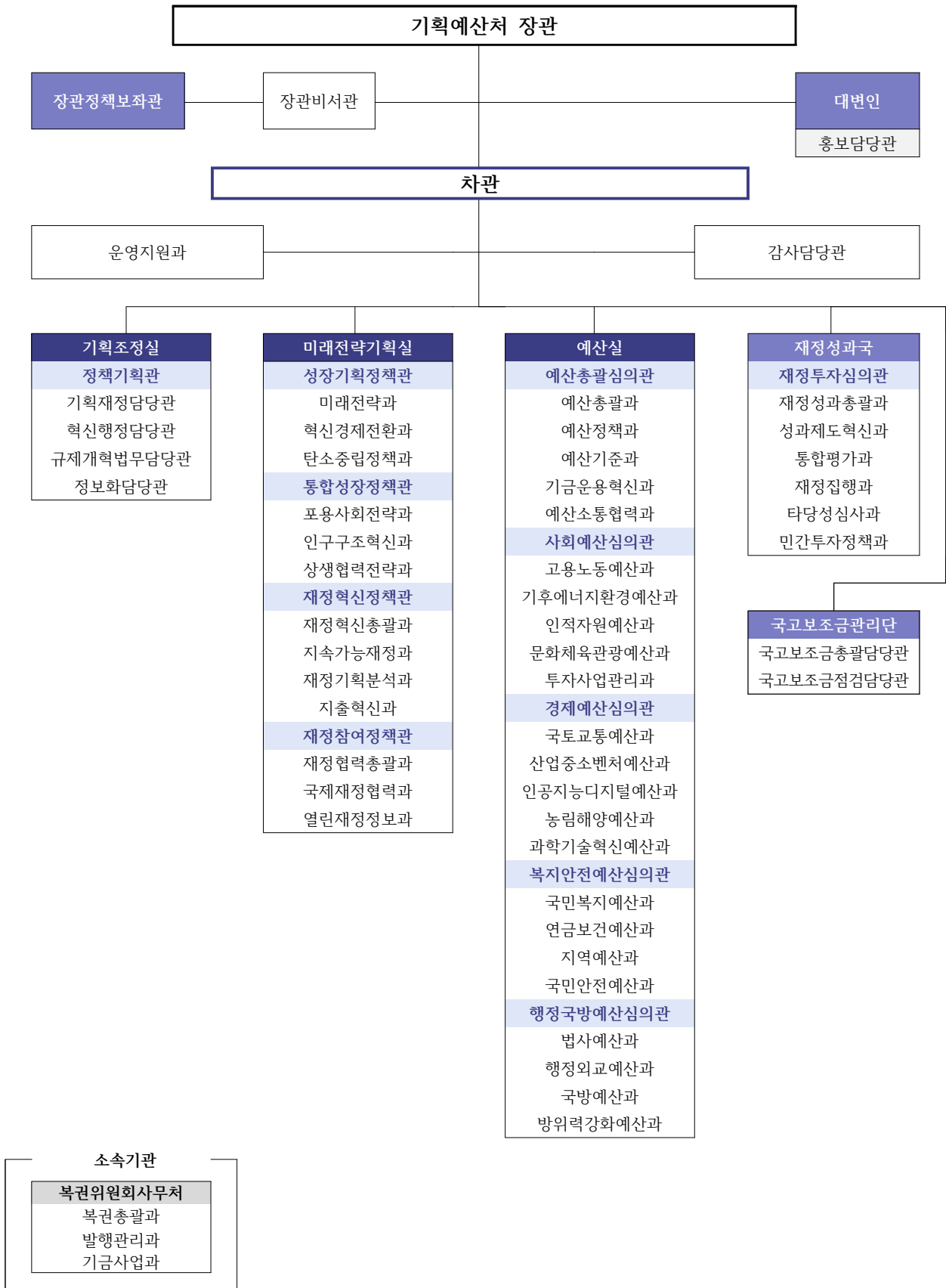
□ (정원) 총 486명(본부 460명, 소속기관 26명)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정무	고공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관리 운영	연구직	전문 경력관	별정직
계	486	2	18	16	39	48	209	144	3	1	2	4
본부	460	2	17	16	36	46	197	136	3	1	2	4
소속	26	-	1	-	3	2	12	8	-	-	-	-

※ '26.7월 기준

[3] 조 직 도



[4] 재정 현황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'25	'26	'27	'28	'29
□ 재정사업 합계					
○ 총지출 (전년대비증가율, %)		101,908	104,214	107,118	108,957
○ 총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273,234	212,370	211,272	210,737
			△22.3	△0.5	△0.3
□ 총지출 구분					
○ 인건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444	475	508	544
			7.0	7.0	7.0
○ 기본경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208	214	221	227
			3.0	3.0	3.0
○ 주요사업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101,256	103,524	106,389	108,186
			2.2	2.8	1.7
□ 예산					
○ (총)지출 (전년대비증가율, %)		42,472	42,530	42,484	42,537
			0.1	△0.1	0.1
○ 총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169,608	102,542	95,547	91,334
			△39.5	△6.8	△4.4
【일반회계】					
○ (총)지출 (전년대비증가율, %)		42,472	42,530	42,484	42,537
			0.1	△0.1	0.1
○ 총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169,608	102,542	95,547	91,334
			△39.5	△6.8	△4.4
□ 기금					
○ (총)지출 (전년대비증가율, %)		59,435	61,684	64,634	66,420
			3.8	4.8	2.8
○ 총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103,626	109,828	115,725	119,404
			6.0	5.4	3.2
【복권기금】					
○ (총)지출 (전년대비증가율, %)		59,415	61,684	64,634	66,420
			3.8	4.8	2.8
○ 총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95,863	101,746	106,997	109,986
			6.1	5.2	2.8
【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】					
○ (총)지출 (전년대비증가율, %)		-	-	-	-
			-	-	-
○ 총계 (전년대비증가율, %)		7,763	8,082	8,729	9,417
		-	4.1	8.0	7.9

[1]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

- (비전) ¹⁾초혁신경제 구축 및 ²⁾따뜻한 공동체 실현
 - ①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
 - ②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 마련
 - ③ 국민의 삶 변화와 모두를 위한 성장 실현
- (중장기 미래 대비) 구조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여 미래전략 제시 및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성장 잠재력 제고
 - 경제·사회적 양극화 해소, 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, 사회자본 활성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포용성·지속가능성 제고
 - 전략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참여·공개·협력 기반 재정운용으로 국민주권재정 구현
- (적극적·전략적 재정투자) 재정의 성과중심 운용과 마중물 역할으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,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
 - 안전망 확충 등 고용상황 대응, 고등교육 혁신·탄소중립 저변 확대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의 역할 증대
 - 전략적 투자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촉진, 국민생활과 밀접한 복지·의료·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
 -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우대 원칙을 예산안 편성과정에 본격 도입,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ODA 질적 내실화
- (재정인프라 혁신) 재정성과 및 재정투자 관리 강화 등으로 전략적 재정운용을 뒷받침, 복권사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
 - 체계적·종합적 성과관리 틀 마련, 신속한 예타 선정·면제·완료로 국가아젠다 뒷받침, 민간투자 확대, 재정집행 관리 강화

[2] 전략계획의 목표체계

임무

-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
-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기틀 마련
- 국민의 삶 변화와 모두를 위한 성장 실현

비전

“초혁신경제 구축” 과 “따뜻한 공동체” 실현

전략 목표	I. 미래전략분과 중장기 미래 대비	II. 예산분과 적극적·전략적 재정투자	III. 재정성과분과 재정 인프라 혁신
성과지표	· 실질 GDP 성장률(%)	· 지출구조조정 규모(조원)	· 재정인프라 혁신 종합지표
성과 목표	1.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	1.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	1. 재정성과 관리 강화
성과지표	· 중장기전략 관련 정책 수립 건수	· 충지출 증가율(전년대비 %)	· 재정성과관리 만족도 조사(점)
성과 목표	2. 포용성·지속가능성 제고	2. 미래대비·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	2. 재정투자 관리 강화
성과지표	· 15세 이상 고용률	· 고용·교육·문화·환경분야 투자규모(조원)	· 재정투자관리 만족도 조사(점)
성과 목표	3.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	3.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	3.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
성과지표	· 지출혁신 방안 도출 수	· 산업, SOC, 농림,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	·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
성과 목표	4. 참여·공개·협력 기반 재정운용	4. 따뜻한 공동체,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	4.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
성과지표	· 열린재정 이용자 수	· 복지분야 충지출 증가율(%)	· 법령 등 제도 정비
성과 목표		5. 지방주도성장 및 자주국방·평화 기반 구축	
성과지표		· 공공질서안전·일행·외통·국방분야 충지출 증가율(%)	

III. 세부 추진계획

전략목표 | 중장기 미래 대비

기 본 방 향

- ◇ AI 대전환·인구구조·기후 변화 등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
- ◇ AX·GX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·산업 구조를 혁신하여, AI 3강 도약·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확립
- ◇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장 중심의 비용 효과적 탄소 감축과 기후신산업 생태계 조성
- ◇ 민생, 청년, 노동, 지역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해소 방향성 및 과제 도출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현안 대응
- ◇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
- ◇ 양극화·지방 소멸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고, 성장-분배의 선순환, 지방주도 성장,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
- ◇ 성과 중심·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-경제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강화
- ◇ 재정운용의 효과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전반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거시·재정정책 간 공조 강화
- ◇ 국민·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재정협력 공조 강화
- ◇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

(1) 주요 내용

-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, 투자위축, 생산성 향상 정체로 KDI·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

* 잠재성장률 전망(%): (한은, '24.12월): ('21~'23)2.1 → ('25~'29)1.8
(KDI, '25.5월): ('15~'24)2.5 → ('25~'30)1.5

- 또한 양극화, AI 대전환, 기후위기, 지방소멸,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복합 위기가 상존
- 이러한 구조적 복합위기는 단기·단편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장기 시계 체계적 전략·비전 마련을 통한 대응 필요

⇒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복합 구조위기 대응 관련 미래전략 제시 및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

- 경제·사회적 양극화 해소, 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대응, 사회자본 활성화 등으로 사회 전반 포용성·지속가능성 제고

- (양극화 완화) 일자리, 소득·자산, 지역 등 분야별 양극화 완화 위한 정책 방향 도출, 단기 현안 대응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대응과제 마련
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적 반전을 달성하고, 부문별 인구감소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·적응력 제고
- (협동조합 활성화) 양극화·지방 소멸 등 구조적 리스크 대응 및 포용적 사회 구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등 과제 추진

- 전략적 재정운용과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화하고, 거시·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하여 경제성장 견인

- 성과 중심·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성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'26~'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- 「재정구조 혁신 TF」 상시 운영, 재정지표 분석·관리체계 고도화,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 마련 등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
-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하여 적시성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,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 확충

□ 참여·공개·협력 기반의 재정운용을 통해 국민주권재정 실질적 구현

- 재정운용 소과정에 국민·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와의 참여 소통 확대 추진
- 주요국 정부와 고위급 협의 채널 구축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재정협력에 적극 참여
- 재정정보 공개 내실화·확대 및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추진

[2] 성과지표

< 전략목표 성과지표 >

성과지표	실적					목표치	'30년 목표치 산출근거	측정산식 (또는 측정방법)	자료수집 방법 (또는 자료출처)
	'21	'22	'23	'24	'25	'30			
실질 GDP 성장률(%)	4.0	2.7	1.4	2.0	1.0	30-50클럽 평균 성장률 상회	30-50 클럽은 인구 5,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들로서,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주요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	한국은행 발표	한국은행 발표

<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>

성과목표	실적		목표치		
	'24	'25	'26	'27	'28
I-1. 중장기전략 수립 및 산업 구조전환 대응 중장기전략 관련 정책 수립 건수	신규		5	6	7
I-2. 포용성·지속가능성 제고 15세 이상 고용률(%)	62.7	62.9	63.0	63.1	63.2
I-3.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 지출혁신 방안 도출 수	신규		30개이상	40개이상	50개이상
I-4. 참여·공개·협력 기반 재정운용 열린재정 이용자 수(명)	391,184	506,352	582,000	669,300	769,695

[3] 외부환경 ·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

- ☐ 중장기전략 등을 통해 제시되는 정책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에 대한 선제적인 갈등관리 필요
 - 광범위한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론화 추진
 - 관계부처 협의, 민관협력체·중장기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갈등 과제를 사전 점검·관리방안 강구
- ☐ 여러 재정혁신 방안 마련 시 일반 국민,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

[4] 기타

- ☐ 해당없음

[1] 주요 내용

- 우리 경제·사회는 인구구조변화·저성장·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와 기후변화, AI 대전환 등 글로벌 메가 트렌드 변화에 직면
 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편적 대응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미래에 대비할 필요

[2] 세부 추진계획

- (중장기전략 수립) 미래 메가트렌드 및 대내 여건을 점검·분석하여 중장기 핵심 아젠다를 도출하고 대응전략을 마련
 - 민관협력체·중장기전략위 및 미래전략포럼·컨퍼런스,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, 전문가·시민사회 간담회, 공모전 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
- (산업구조 대전환) AX·GX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·산업 구조를 혁신
 - (AX(AI Transformation)) AI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, 모델 개발, 인재 양성, AI 대전환 등 핵심 정책과제 발굴 추진
 - (GX(Green Transformation)) 2035 NDC 이행 및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K-GX 전략 수립 지원
- (탄소중립 기반 구축) 배출권거래제 + 자발적 탄소시장 등 시장 기반을 활용한 감축 유인 제고 및 ESG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
 - K-MSR 도입, 배출권시장 참여자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관련 논의 지속
 - 시장의 수요·공급 활성화, 시장 기반 마련 등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관련 대책 수립

- EU CBAM 본격 시행에 따라 수출기업 부담 현실화, 우리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전략 연구
- 녹색·전환금융 연계 등 기업 ESG 공시 지원 위한 논의 지속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중장기전략 등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집단 등에 대한 선제적 갈등관리 필요
 - 광범위한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하여 충분한 공론화 추진
 - 관계부처 협의, 민관협력체·중장기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갈등 과제를 사전 점검·관리방안 강구
- (AX·GX 전략 마련) 부처 간 협의 조정 및 재정지원 관련 과제 검토 등 적극 협의
- (탄소중립) 195개 회원국 중 134개국 2035 NDC 제출('26.3월 기준),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△53 ~ 61% 감축 목표 제출('25.11월)
 - * 2030 NDC는 △40% 감축 목표 제출('21년)
 - ※ 주요국 중 선형감축을 초과한 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영국, 독일 2개국이고, 그 외 국가는 선형감축 이하의 목표 제출
 -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감축목표 상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 간 첨예한 입장차이 有
 - * **2035 NDC 발표 다음날 주요 언론 동향**
 - ↳ 미·중 외면하는 탄소 감축, 왜 우리가 앞장서 자해하나(조선)
 - 사실상 산업계 손들어준 미온적 목표... 달성 불투명(경향)
 - EU 공급망실사 등 글로벌 ESG 제도화 + 한국형 지속가능공시 초안 既발표 → 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 필요

[4] 참고자료 : 해당사항 없음

(1) 주요 내용

- (양극화 대응) 소득분배 악화*, 세대간 고용격차 심화**,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와 물가상승***등으로 체감경제 어려움 지속

* (지니계수) '230.323→'240.325, (5분위배율) '235.72배→'245.78배 (데이터처, '25.12월)

** 전체(15세~)/청년(15~29세) 고용률(%) : ('22)62.1/46.6 → ('25)62.9/45.0

*** 생활물가지수(2020=100) : 120.60(데이터처, '25), 최근 고환율·유가상승 등 물가 상방압력 지속

- 복지·일자리·상생, 지역균형성장 등 민관협력체와 통합성장분야 기본방향 및 과제 도출·구체화 통해 양극화 완화 전략 강구

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총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추세 반전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부문별 충격에 대한 적응력 제고

-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형성 생애주기 지원 강화*와 함께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사회 구축**

* 일·가정 양립 문화 조성, 출산·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 완화, 주거·일자리 지원 강화 등

** 고령자 고용 지원,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확립, 고령자 복지제도 재구조화 등

-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기반 강화* 및 인구 감소에도 국가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지방·교육·국방 등 부문별 시스템 개편**

* 경제활동 참여 유도, 미래형 인적자본 양성, 신산업 활성화 지원 등

** 국방·교육 등 필수서비스 및 지방 SOC 공급 체계·방식 개선 등

-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·제도적 기반 마련 및 거버넌스 구축,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

- 이와 더불어 사회연대경제 성장·발전 및 생태계·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현

[2] 세부 추진계획

- (양극화 대응) AI대전환, K자형 경제 고착화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위한 주요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
 - (일자리·상생) AI 전환기 고용충격에 대비하여, 기본사회 구축,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본적인 삶 보장 강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
 - (지역균형) 거점육성, 광역간 연계 등 5극3특 성장기반 구축, 핵심 인프라 구축 확대 등 지방주도 성장, 자생력 강화 중점 지원
-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·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* 핵심과제 마련·발표
 - * 저출생 극복, 초고령사회 대응, 성장기반 강화, 국가 기본기능 유지 등
 - 전문가·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과 주요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·전략적 정책과제 마련
 - 복지부,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토대로 그동안의 인구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,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·집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
- (협동조합 활성화 지원)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,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-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, 지역사회 참여 확대,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·추진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산업전환기에 따른 청년, 기업 등 이해관계자 및 지원기관(국회, 관계부처 등) 간 갈등으로 인해 정책 수립·추진에 어려움 발생 우려
 - 소통채널 구축,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지속, 부처·이해관계자, 중장기전략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지속 보완
- 복지제도 개편, 외국인 고용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 마련시 재정부담 증가, 사회적 갈등 심화와 같은 문제 발생 우려
 -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부터 관계부처, 전문가, 이해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적극 마련
- 사회연대경제·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연관된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선제적인 갈등관리 필요
 - 현장전문가, 일반국민 등 다양한 집단과의 의견수렴 채널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이해 제고
 - 전문가간담회, 시·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마련

[4] 참고자료 : 해당사항 없음

[1] 주요 내용

-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'26~'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 - 성과 중심·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·성장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중기 재정전략 수립
- 「재정구조 혁신 TF」 상시 운영, 재정지표 분석·관리체계 고도화,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 마련 등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
 - (재정구조 혁신) 「재정구조 혁신 TF」를 통해 지출 + 세입 + 사회보험·연금 + 재정제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
 - (재정지표 관리) 재정적자·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, 우리 재정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추진
 - (재정분권) 중앙·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주도 성장 지원
- 거시경제 관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재정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 확충

[2] 세부 추진계획

- 최근의 경제·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기 재정운용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
 - 중기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·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, 중기계획의 실효성·책임성 제고 및 전략성 강화

- 「재정구조 혁신 TF」를 통해 지출+세입+사회보험·연금+재정제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 추진
 - 하위분과인 지출혁신반(「지출효율화 TF」)을 통해 기존 단년도 지출구조조정과 함께, 제도개선 등 과제에 대해 상시 효율화 병행
-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 - 매월 주요 재정통계(총수입·총지출, 수지, 채무 등)를 산출·분석하고 ‘월간 재정동향’을 통해 공개, 신규 보완지표 추가 검토
 - IMF, S&P 등 주요 국제기구·신평사의 재정운용 평가를 점검하고,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통계 산출·관리체계 정비
- 「범정부 재정분권 TF」에서 중앙·지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제시
 - 중앙·지방 재정여건 및 가용재원 분석, 세원 이양에 상응하는 지방 기능이양 방안 등 검토
-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간 공조를 강화하여 적시성 있는 재정정책 수립,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 확충
 - (협력 네트워크) 재정이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경부·한은 등과 정책 공조를 통한 최적 Policy Mix 추진
 - (거시지표 모니터링) 선제적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 경제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, 주요 경제지표 분석 및 시사점 도출
 - (분석역량 고도화) AI를 활용하여 거시경제 데이터 수집 자동화, 수요자 기반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분석·가공 기능 구축 추진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여러 재정혁신 방안 마련 시 일반 국민,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

[4] 참고자료 : 해당사항 없음

(1) 주요 내용

- 재정운용 과정에 국민, 지방정부 등 정책수요자와의 참여 소통 확대를 추진하여 국민주권재정 구현 뒷받침
 - 국민 참여범위 확대, 지원협의회 구성·역할 확대 및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홍보강화를 통해 참여예산제도 인지도 개선
 - 국민의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대국민 재정교육을 강화하고 재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품질 지속 관리
 - 지방정부와의 재정·정책 협력 소통 강화 등 협력기반 구축
- OECD, PEMNA 등 다자협력체·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재정분야 글로벌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, 정보 공유 및 규범 정립 등에 협력
 - 주요국 간 재정운용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재정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대안 제시
 - 개도국 재정 거버넌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분야 지식 공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
- 중앙·지방·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 범위를 넓히고, 알기 쉽고 투명하게 재정정보 확대 제공
 - 「열린재정」을 「모두의 재정」으로 개편하여 중앙재정 통계 확대는 물론, 지방·교육재정 통계도 중앙재정과 유사한 항목 중심으로 확대 공개

[2] 세부 추진계획

□ 재정 운용의 참여 소통 활성화

-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시 국민제안 사전검토를 담당할 전문가 협의체를 ‘국민참여자문단’^(기존 지원협의회)으로 확대·개편

* 자문단 구성은 기존부처 추천 → 개정부처 +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고, 규모, 분야를 확대

- 국민의 재정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신설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무강사진, 콘텐츠 개발 등 교육인프라 확충

*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신설

- 기획처 장관 주재로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여하는 「중앙·지방재정 전략협의회」를 정례화하여 중앙-지방 재정 소통협력 기반강화

□ 국가발전전략·재정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

- 지역별 주요 재정당국과 고위·실무급 협력 채널 구축하여 재정 운용 및 구조개혁 분야 공통 의제 및 협력사업 발굴

- 아프리카·중남미 등으로 재정협력을 확대하고 재정 분야 자문 프로그램 모듈화를 통해 개도국 재정 거버넌스 발전 체계적 지원

- 국제신용평가사·IMF 등 연례협약에 적극 대응해 우리 재정운용 성과가 신용도 평가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

□ 재정정보 공개 확대 강화

- 중앙·지방·지방교육의 재정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「모두의 재정」을 구축하고, AI를 활용하여 재정정보 유형별 맞춤형 AI 서비스* 제공

*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단순 질문답변 서비스를 넘어 통계·보고서 분석, 수혜서비스 추천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‘국민이 주인인 열린 재정’ 실현을 위해 일반 국민, 전문가 및 관계부처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
-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용평가사 및 국제기구는 재정건전성 측면 지속 강조
 - 우리 재정운용이 회복·성장·구조개혁을 견인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음을 신평사 등에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필요
- 재정정보공개플랫폼 개편 시 기획처(열린재정), 행안부(지방재정), 교육부(지방교육재정) 등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

[4] 참고자료

- 재정정보공개시스템 ‘열린재정’(openfiscaldata.go.kr)
- 재정교육시스템 ‘e재정배움’(http://finedu.moef.go.kr)

기 본 방 향

- ◇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
 -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,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문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과 低성과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
 -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, 기금운영비·수지차기관 경상비 절감 등 적극적 재정운용 혁신 병행 및 정책수요자 맞춤형 소통·홍보 강화
- ◇ 적극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안전일터 조성, 고등교육 혁신,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환, K-콘텐츠 수출·문화향유 격차 해소 등 미래대비·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
 -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및 위험요인 선제대응을 위한 산재예방 투자 강화, 균형발전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및 국가 책임 기반 보육·교육 내실화
 -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이행, K-콘텐츠 수출 및 확산 지원, 문화향유 격차 해소
- ◇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, 창업생태계 조성, 과학기술과 AI의 융합을 통한 기술 주도 성장 및 AI 3강 공고화 등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
 - 국내 첨단·주력산업 기반 고도화, AI·딥테크 등 첨단분야 스타트업 육성 강화, 유망 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적기 대응
 - SOC 투자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며,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고,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
- ◇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, 저출생·고령화 적극 대응, 연금개혁 뒷받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복지·의료·안전에 투자 확대
 - 양극화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매트 구축, 저소득·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뒷받침
 -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, 연금개혁 후속조치 지속 추진 및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등 사고현장 대응 강화
- ◇ 지방주도성장·국방분야투자확대·ODA개편을 통한 국가역량강화
 - 지방주도 성장지원,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, 국익 연계 상생 전략형 ODA 개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

(1) 주요 내용

- 새로운 시대로 대전환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「적극재정 → 성과제고 → 경제성장 → 지속가능재정」 선순환 구조 정착
 - 우리 경제의 대전환·대도약을 뒷받침하고, 국정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재정 기조 유지
 -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과 성과 기반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프로세스 구축
- 미래대비, 성장잠재력 제고, 사회안전매트, 국익확보·안보강화 등 핵심 투자과제 적극 투자
 - (미래대비 투자) 적극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안전일터 조성, 고등교육 혁신, 탄소중립 저변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환, K-콘텐츠 수출·문화향유 격차 해소 등 사회 분야 맞춤형 재정 투자
 - (성장잠재력 제고)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, 창업생태계 조성, 과학기술과 AI의 융합 통한 기술 주도 성장 및 AI 3강 공고화 등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
 - (사회안전매트)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,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
 - (지방주도 성장 및 국민안전 평화 기반구축)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및 자주국방 기반 강화와 전략적 ODA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
- 철저한 성과 기반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하여 핵심사업 투자 재원 마련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 - (재량지출) 저성과·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, 연례적 행사·홍보 등 경상경비도 지속 절감하여 15% 감축
 - (의무지출)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10% 수준 절감 목표 설정

[2] 성과지표

< 전략목표 성과지표 >

성과지표	실적				목표치	'30년 목표치 산출근거	측정산식 (또는 측정방법)	자료수집 방법 (또는 자료출처)
	'22	'23	'24	'25	'30			
지출구조조정 규모(조원)	△24	△23	△24	△27	△33	최근 4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(4%) 추세를 감안하여 '25년 실적 대비 20% 이상 설정	'31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	'31년 정부편성 예산안 확인

<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>

성과목표	실적		목표치		
	'24	'25	'26	'27	'28
Ⅱ-1.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총지출 증가율(%)	2.5	8.1	경상성장률 초과 또는 미만		
Ⅱ-2. 미래대비·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강화 고용·교육·문화·환경분야 투자규모(조원)	83.3	89.5	90.4	전년대비 1% 이상	
Ⅱ-3.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산업, SOC, 농림, 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(조원)	90.6	100.5	107	116	
Ⅱ-4. 따뜻한 공동체,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(%)	7.5	4.7	8.2	전년대비 5.5% 이상	
Ⅱ-5. 지방주도 성장 및 국민 안전·평화 기반 구축 공공 질서 안전·일행·외통·국방 분야 총지출 증가율	1.6	1.2	8.1	4	

[3] 외부환경 ·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

- ☐ 저출생·고령화, 양극화 등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 상존
- ☐ 정치권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각적인 재정지출 증대 요구

[4] 기타

- ☐ 해당없음

[1] 주요 내용

- 성장동력 확충 및 구조개혁 지원 등 **적극적 재정운용**과 함께 **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**를 위한 **전략적 자원배분 체계** 구축
 - 재정지출의 성격(의무·재량, 사업비·경상경비, 한시·계속)과 무관하게 **쏠 부처 모든 사업**을 대상으로 **지속여부** 및 **규모** 재검토
 - 유사·중복 사업의 사전 차단, 관행적인 효과저조·과다지원 보조 사업의 적극적 정비를 통해 **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재투자** 도모
 - 기금운영비, 수지차기관 경상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**낭비를 최소화**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관리
- ⇒ 「적극재정 → 성과제고 → 경제성장 → 지속가능재정」 선순환 구조 정착

[2] 세부 추진계획

- 각 예산분야에 대한 성과 제고 및 지출효율화 추진 병행
 - AI 대전환, 신산업 혁신 등 **성장잠재력 제고**, 저출생·고령화, 탄소중립, 양극화 등 **구조적 문제 해결**에 과감한 투자
 -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저성과·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·폐지 또는 근본적 구조개선 추진
 - 계속사업 통폐합 노력과 동시에, 기 통폐합된 사업 관리, 신규 사업의 유사·중복 차단을 통한 사업 통폐합의 질적관리 강화
- 예산운용 과정에서 부처별 예산 협의회, 지방재정협의회, 국민 참여예산제도, 전문가·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완성도 제고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지출 구조조정, 유사·중복사업 정비, 성과관리 강화 등 지출혁신 추진 시 부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우려

[4] 참고자료 : 해당사항 없음

[1] 주요 내용

- 빈틈없는 고용안전망 구축, 일터 안전 보장, 미래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과 탄소중립 가속화 및 K-콘텐츠 수출·문화향유 격차 해소 지원

[2] 세부 추진계획

- ①고용안전망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, ②교육 전주기 투자와 지역기반 미래인재 육성, ③탄소중립 가속화 및 콘텐츠 수출·문화격차 해소 지원

①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및 설비·인력 등 산재예방 투자 강화

- 청년, 중장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·이동 촉진 및 체불근로자, 장애인 등 노동약자 보호 강화로 고용안전망 확충
- 현장체감형 예방 사업 확대 및 취약부문 집중 지원을 위해 전분야에 걸친 필수 설비·인력 확충 등 산재예방 투자 강화

② 교육 전주기 투자와 지역 기반 미래인재 육성

- 거점 국립대 육성, 첨단 분야 대학 대학 교육혁신 및 이공계 학생 지원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
-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실현,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, 틈새 돌봄 등을 통해 영유아 지원 강화

- ③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,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추진
-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투자유도를 위한 녹색금융 공급을 확대하고,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
 - K-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특화 정책자금 등 적극 지원하고, 문화소비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☐ 고용·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 지원의 적절성 여부,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 문제제기 가능성

[4] 참고자료 : 해당사항 없음

[1] 주요 내용

- AI 3대 강국 실현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중점 투자

[2] 세부 추진계획

- 대내외 불확실성 下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투자방안 마련
 - 국내 첨단·주력산업 기반 고도화, 유망 산업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적기 대응
 - AI·딥테크 등 첨단분야 스타트업 육성 강화, 소상공인 재기·성장지원 등 中企·소상공인 점프업 지원
-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, 핵심 전략기술 개발, 초산업 AI 전환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
 - (AI경쟁력 강화) 전국민 AI 일상화, AIDC 생태계 조성, 피지컬 AI 육성, 국내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 등 AI 산업 적극 육성
 - (R&D) 전략적 R&D 투자와 혁신기반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
- SOC 효율화,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
 - (SOC) SOC 효율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, 미래 교통수단 도입, 중장기 교통망 계획 수립 등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
 - (농어촌) 농어민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, 규모화·스마트화 등으로 농어업의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(외부환경) 美 신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되며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위협 중
- (갈등요인) 경제활력 제고 투자 강화 위한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심사지연 우려

[4] 참고자료 : 해당사항 없음

[1] 주요 내용

- 사회안전매트 구축 및 저출생·고령화 대응, 지역필수의료 확충, 재난 대비 인프라·현장 대응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복지·의료·안전에 대한 지원

[2] 세부 추진계획

- 양극화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매트 구축,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
 - 저소득층·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뒷받침,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고 어르신 돌봄 등 지원 강화
-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및 연금개혁 후속조치 지속 추진
 -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, 보건의료 분야 체질개선 중점투자,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위한 연금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
-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
 - 재난 예측·감시체계 고도화, 재해예방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극한 재난 선제적 대비, 첨단장비 도입으로 사고 대응능력 제고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복지·의료·안전 등 부문별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강하고, 지원 대상·범위 등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
 - 부처별 예산 협의회(부처), 지방재정협의회(지방),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(민간)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노력

[4] 참고자료 : 해당사항 없음

[1] 주요 내용

- 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하고, 안보정세 급변 및 병역자원 감소 대응을 위해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며 ODA 사업을 중점 지역·국가에 집중하여 K-이니셔티브 확산 및 국익 기여

[2] 세부 추진계획

- ☐ 지방주도성장 지원
 - '2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재정사업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도입
- ☐ 자주국방 기반 강화 및 국방투자 효율성 제고
 -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및 첨단 무기체계 전환 추진, 상비병력 재구조화 및 장병복지 증진 등 국방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
- ☐ ODA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추진
 - 국조실·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ODA 사업점검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AI·문화 등 강점 분야의 전략적 프로젝트를 중점 지역·국가에 집중 투자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☐ 저성과·부실 ODA 사업 대폭 정비 과정에서 각 부처로부터 사업 유지 또는 증액 요구 등 반발 가능성
- ☐ 국방 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, 사전 타당성 제도 및 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 투자 내실화 추진 필요

[4] 참고자료 : 해당사항 없음

기 본 방 향

- ◇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중심 재정 인프라 혁신을 추진
- ◇ 성과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「지출효율화 및 국민 감시 플랫폼」으로 활용
- ◇ 기금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운용의 공공성 제고 및 투자 다변화를 유도
- ◇ 경제·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전면 개편
- ◇ AI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·민생안정 등에 대응하여 재정집행을 관리
- ◇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권기금 사업의 사회안전망 지원을 통해 재정운용의 공익적 가치 제고
- ◇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미정산·미징수 관리 노력을 지속하고, 교육·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부정수급 예방활동도 점진적으로 강화

[1] 주요 내용**□ 재정 운용의 수 과정을 총괄 관리**

-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 및 중립적·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
- 기금평가시 자산운용의 안정성·수익성 외에도 코스닥·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

□ 재정의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고, 재정·민자를 활용한 경제성장 지원

-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시 사전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등 운용
- 신산업 민자 도입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과 향유하기 위한 「민자활성화 방안」 마련
- 재정사업의 조기성과 도출 등을 위한 상반기 신속집행 관리

□ 복권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복권기금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공익적 가치 제고

-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복권 시스템을 개편하고,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

[2] 성과지표

< 전략목표 성과지표 >

성과지표	실적					목표치	'30년 목표치 산출근거	측정산식 (또는 측정방법)	자료수집 방법 (또는 자료출처)
	'21	'22	'23	'24	'25	'30			
재정인프라 혁신 종합지표	12.6	1.6	4.2	6.5	5.2	9.6	성과평가환류액 및 투자절감액은 연평균 3% 증가,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10% 성과우수사업,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목표로 산정	성과평가환류액(A) + 투자절감액(B) + 복권기금공익사업 중 성과우수사업 규모(C) +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(D) *A :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환류 규모(조원) B : 예타 총사업비 절감액(조원) C :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성과평가결과 우수사업 규모(조원) D :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	부처별 예산요구서, PIMAC 연차보고서

<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>

성과목표	실적		목표치		
	'24	'25	'26	'27	'28
Ⅲ-1. 재정성과 관리강화 재정성과 관리의 만족도(점)	-	-	79.5	79.5	79.5
Ⅲ-2. 재정투자 관리강화 재정투자 관리의 만족도(점)	-	-	79.5	79.5	79.5
Ⅲ-3. 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(%)	69.6	76.9	75.8	75.8	75.8
Ⅲ-4.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법령 등 제도정비*	완료	완료	완료	완료	완료
*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(26.3) 등 대책에 있는 법령 개정, 제도 정비 등의 계획 이행 여부					

[3] 외부환경 ·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

- ☐ 여러 재정성과·투자 혁신 방안 마련 시 일반 국민,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

[4] 기타

- ☐ 해당없음

[1] 주요 내용

- (성과관리 인프라 구축)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위해 중립적 외부 전문가 중심의 ‘체계적 지출구조조정 시스템’을 마련
 - 15개 분야, 총 150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쏠부처 사업을 평가하고, 개별평가 주관부처(행안부·지방위) 등도 함께 참여
- (재정사업 성과평가) 적극적 재정환류를 위해 평가 결과를 명확히 유형화하여 예산에 직접 연계하고 평가보고서 등을 ‘열린재정’에 공개
 - ①평가결과를 예산요구시 반영(5월), ②예산안 반영 정도,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열린재정에 모두 공개(9월)
- (자산운용 관리)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, 공적역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종합적 논의기구를 마련
 -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·공공성을 만족하는 자산운용 방향을 모색하고 투자플운영위원회를 ‘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’로 확대·개편

[2] 세부 추진계획

- (성과평가)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‘재정사업 자율평가’를 ‘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’로 개편(’26년~)
 -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·실효성 제고
 - 평가보고서,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,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(부처별) 등을 ‘열린재정’에 모두 공개

○ (성과목표관리) 성과지표의 적정성 점검.개선*, 성과목표관리 환류체계 강화 및 대국민 접근성 개선

* 「1프로그램 1성과지표」원칙이 부적절한 프로그램 점검.개선과 성과계획서에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포함 등 활용도 제고

- 성과목표관리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화 방안 마련과 우수부처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 - 성과목표관리 결과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포털「열린재정」에 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 강화
- (자산운용 관리) 기금 자산운용시 참고할 경제·금융시장 현황·전망,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‘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’ 수립
-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 방향, 연기금투자폴 운영·관리 등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수시 개최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☐ 재정성과 혁신 방안 마련 및 재정성과평가 수행 시 일반 국민,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필요

[4] 참고자료

- ☐ 해당없음

[1] 주요 내용

- (타당성심사 관리) 경제·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, 객관·공정한 심사와 전략적 운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
 - 균형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, 국가아젠다 추진을 뒷받침하고 효과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타제도 지속 개선
 - 연 4회(분기별) 예타 대상·면제사업 선정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략적 적기 투자를 지원
- (민간투자) 민간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,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실제 투자 실적으로 구현
 - 신사업(데이터센터 등)·신유형 도입, 국민참여 확대*, 지방민자 활성화** 등 민자 제도 개선 및 후속조치 시행
 - * 국민참여공모인프라펀드, 민자사업 정보공개·온라인교육 강화 등
 - ** 지방우대 가점 신설,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등
 - 신사업 모델 마련, 현장상담, 후속컨설팅 등을 통해 신사업 및 지방 유망사업 등이 민자사업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
- (재정집행 관리) 경기·민생안정 등을 위해 재정집행 목표 및 속도 관리
 -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신속집행 목표 설정·관리
 - 경기·민생회복과 밀접한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집행 집중관리

[2] 세부 추진계획

- 경기·민생회복 뒷받침, 이·불용 최소화 등을 위해 '26년 중앙정부 신속집행 대상 267.2조원 중 상반기 63.0% 집행 추진
 - 또한,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경제에 밀접한 핵심사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별하여 상반기 70% 집행 추진
- 年 4회(분기별)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
 - 타당성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상시 접수·실시하고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정 관리
 - 경제·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예타 제도 개편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·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
- 「민자사업 활성화 방안」을 발표하고 과제별 후속조치를 위해 법령·지침 제·개정, 사업모델 발굴, 펀드 모집 등 추진
 -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등 법·제도를 정비하고,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 및 신규사업·펀드 투자 사례 등 발굴
- 권역별 설명회, 현장 컨설팅, 특화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지원
 - 신사업 모델 마련, 민자카라반(7개 권역) 가동 등을 통해 사업발굴 단계부터 적격성조사 의뢰 단계까지 밀착 지원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☐ 예타제도 개편방안 및 예타·타재 등 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관계부처, 지자체 등 의견 조정 필요
 - ⇒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건의사항 반영
- 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중 제도 안착 지연 우려
 - ⇒ 관계 부처·전문 기관·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, 설명회·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 안착 및 사업발굴 지원
- ☐ 면밀한 재정집행 점검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 지연, 자금배정 지연 등에 따라 집행목표 미달성 가능성 상존
 - 범부처 재정집행 점검회의, 찾아가는 현장 집행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, 해소방안 도출 등 집행관리 강화 추진

[4] 참고자료

- ☐ 해당없음

[1] 주요 내용

- (복권사업 지속가능성 제고)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복권사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
 - 복권의 모바일 구매환경 개선, 복권판매점 상생방안 마련, 클라우드 기반의 복권시스템 개편 추진
- (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강화)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·지원하고, 적시·적정 집행되도록 체계적인 관리 추진
 - 효율적인 복권기금 운용을 위해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 강화 추진
- (복권의 공익적 가치 확산) 복권구매가 일상 속 나눔 행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
 - 국민 선호를 기반으로 한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브랜드화 및 사업 발굴·홍보를 통해 복권에 대한 인식도 제고
 - 복권의 건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선제 대응 및 중독예방 활동 지속 실시

재정 인프라 혁신(재정운용 효율화)

복권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혁신

복권사업의 안정성
·신뢰성 제고복권지원사업
효율화복권기금의 사회
안전망 기능 강화복권사업의 건전성
관리 강화

[2] 세부 추진계획

- (소비자 편의 증진) 판매방식 개편,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
 -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개시(2.9, 상반기 시범운영* → 하반기 본격도입)
 - * 평일(월~금) 판매 / 현행 인터넷 판매한도(1회차 5천원, 총량 전년도 5%) 유지
 - 저매출 판매점 지원 강화 등 판매점 상생방안 마련
 - 시장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추진
- (복권기금의 사회안전망 강화) 취약계층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강화하고 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
 - (편성) 3개 브랜드 사업군*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하고 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
 - * 소외계층 복지지원, 저소득층 주거안정, 장학사업 사업군
 - (집행) 저소득·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수행
 - 분기별 집행점검을 통해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과정상 애로사항 청취 및 집행 독려
 - (환류) 법정배분 가감제 및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배분 효율성 높이고, 경직적인 법정배분제도에 대한 개편 추진
- (복권의 공익성·건전성 제고) 복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건전화 프로그램 확대로 건전 문화 정착 유도
 - (공익성 홍보 강화)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·추진하여 복권의 공익성에 대한 인식 제고
 - 기금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중점 홍보하여 국민들의 구매 효능감 제고
 - 지상파 TV를 주로 활용하되 최근 광고시장 변화추이에 따라 유튜브,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

- (건전문화 확산) 건전한 복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복권 관련 불법행위 대응 및 구매자 보호 조치 강화 등 적극 추진
 -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시스템 신규 도입*, 온·오프라인 모니터링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
 - * 불법 사이트 URL 자동 추출 시스템, 스팸문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
 - 복권 건전구매가이드 및 맞춤형 과몰입 프로그램을 개발·제공하고 판매점 지도·점검 및 중독·예방 캠페인 확대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복권기금은 기존 복지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지출이 경직적인 반면, 새로운 민생수요는 증가 →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성 증대
 - 법정배분제도 가감조정제 강화를 통한 성과평가 실효성 확보 및 기계적 법정배분제도 개편 추진
 - 기존 법정배분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

[4] 참고자료

- 복권제도 소개, 복권정책 최신동향, 회의결과 등을 상시적으로 공지하는 복권위 홈페이지 등
 -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www.bokgwon.go.kr
 - 복권통합포털(공식홈페이지) www.dhlottery.co.kr

[1] 주요 내용

- (단기) 합동점검 강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 지속, 사업완료 후 미정산·미징수 상태 보조금의 국고 신속 반납 추진
- (중장기) 부정수급 사례 유형화, 부정수급 점검단의 교육·컨설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단속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점 전환

[2] 세부 추진계획

- (단기) 보조금 관련 재정규율 확립 및 국가재정(세외수입) 확충
 - 기획처 중심 부처합동 일제점검 실시, 빈틈 없는 적발 위해 제도* 보강, 부정수급 신고 유인 제고 위해 신고포상금 확대 등 추진
 - * 상시 신고센터 설치(재정정보원), 인력·직제 확충(기획처 국고보조금관리단 정식 출범) 등
 - 보조금 반납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, 반납 독려를 위한 실효적 제재*·인센티브** 방안 시행
 - * 국고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해 추가 교부 제한 등
 - **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실적을 포괄보조금 지방정부별 차등 지원 기준에 반영 등
- (중장기) 부정수급 점검 외 교육·컨설팅 등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
 - 유형별 사례분석(AI통계모델 활용) 등을 반영한 점검단 역량 강화
 - 보조금 주요절차(신청, 교부·집행, 정산·반납) 계기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, 부정수급 빈발 업무에 대해 사전 컨설팅 제공
 - 부정수급 방지 위한 제도개선 제안* 등에 포상 실시 검토
 - * 모범사례 확산 위한 권고 등 부정수급 심사 소위의 역할 확대

[3]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

- 부정수급 적발, 후속조치(부정수급 환수 등) 등에 대한 사업 감독 부처의 미온적 대응 우려
- ⇒ 기획처 중심의 부처합동 일제점검 확대, 점검 결과에 따른 타협 없는 후속조치 등 실효성 있는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

[4] 참고자료

- (법령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- (지침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작성지침,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
- (기타)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등